추진단 "도청별관 '5월의 문' 수용 불가"

10인대책위, 추진단·시민사회단체 첫 회동

여론 조사·새 중재안 등 놓고 고심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최종안 마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옛도청 철거 문제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합의안인 '5월의 문'의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광태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10인 대책위'가 활동 시한을 보름 여 남겨둔 시점에서 1년여를 끌어온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인 대책위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이병훈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민점기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별관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10인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 광주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합의안인 '5월의 문'(다수안·별관 1, 2층을 뚫어 터널식으로 만드는 것), 별관 3분의 1 이상 존치(소수안)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두개 안에 대해 이미 검토를 마쳐 수용불가 판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수안인 '5월의 문'의 경우 이 건물과 신축될 문화전당의 어린이지식문화원 건물과 약 9천900㎡가 겹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소수안인 3분의 1안과 관련, 보전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 일부를 철거할 경우 사실상 건물을 새로 짓는 셈이어서 54억원의 추가비용, 공사기간 10개월 연장을 감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10인 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와 추진단의 공식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추가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해결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일 잠정적으로 계획된 방송토론회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자인 우규승씨와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10인대책위 위원들은 시민 사회의 방안을 토대로 한 정부측과의 협상 여부, 추가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인 대책위' 간사인 조영택 의원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뒤 시민 사회 단체의 합의안을 정부 측에 받아들이도록 설득할지, 여론조사를 할지, 또 다른 중재안을 마련할 지 결론을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인대책위'가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5월 단체는 물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인 대책위에게 '5월의 문' 합의안을 정부측에 관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10인대책위가 별도의 중재안을 마련하는 데 부정적인데다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별관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5월 단체들에게 별관 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5·18사적지 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광주전남시도민대책위원회'는 1일 논평에서 "문광부는 도청 별관 원형보존과 상생공존 방안인 5월의 문 가운데 하나를 신속히 수용해 문화전당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월의 문'이 아니라면 완전 원형보존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안이 없다"며 "10인대책위는 사회적 합의결과와 5월 단체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5월의 문이나 완전원형 보존 방안을 문광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10인대책위와 회동을 갖고 '오월의 문'을 다수안, 별관 3분의 1 이상 존치하는 것을 소수 안으로 합의한 내용을 10인 대책위에 전달했다.

5·18부상자회와 유족회 등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에서 "비록 원형보존은 아니지만 지역 시민사회가 합의한 사실상 단일한 해결방안인 '5월의 문'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5월 단체들은 이어 "10인 대책위는 수차례 약속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의 합의를 받아 이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관철시키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고 주장했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공안' 명칭 사라지나

검찰, '민생' '민안' 등 새이름 변경 검토

검찰이 '공안(公安·public security)'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공안정국 조장' 등의 정부 비판 구호가 다시 등장한 점 등을 고려해 '대검 공안부' 등의 부서 명칭을 '민생 수호'의 의미를 내포하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찰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 검찰 내 공안 업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국에서 맡았으나 이후 대검 공안부가 따로 설치됐고 5공화국 때는 대검 공안부가 4개과까지 늘어났으며 전국 지방검찰청에도 공안부가 확대 설치됐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구속돼 검찰과 특별한 악연을 가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크게 축소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검 공안부 4과가 폐지됐고 참여정부에서는 2개 과만 남게 됐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공안 검사 출신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공안 부문에 힘이 실렸고, 작년에 일어난 촛불시위와 최근 잇따른 각종 대공 사건은 공안 검사들의 입지를 크게 넓혀 놓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검찰 공안부서의 '공안'이란 명칭이 어감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도 검찰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을 대체할 명칭으로는 '민안(민생안녕)', '민생'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공안' 명칭의 변경은 노무현 정부 때도 유력하게 검토됐던 방안이다. 당시 검찰은 "공안이란 이름에 문제가 없다"며 완강히 거부해 결국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해임 건의 공공기관장 4명 사의

지난달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해임이 건의된 4명의 기관장 모두가 자진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일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 건의된 산재의료원장, 소비자원장, 영화진흥위원장, 청소년수련원장 등 4명이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며 "임면권자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관례상 모두 수리하면서 의원면직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사퇴에 따른 면직일 경우 해임건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은 제기되기 힘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14기 민주평통 출범 1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고 현실화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 동향도 대책도 오리무중

취업실태·지역·규모 등 구체적 통계 없어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1일부터 적용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현실화했으나 정작 이들의 고용동향이 거의 파악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힘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70만~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추산할 뿐 고용불안 시점과 지역, 세부규모 등 구체적 정보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기간제한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왔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전날까지 법을 개정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1일부터 적용된다.

기간제법은 2007년 7월 이후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자동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해고)를 통보하게 된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규모 계약해지는 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정리해고와 달리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실업통계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아 대책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대다수가 개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한두 명씩 일터를 떠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고 노조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점도 실직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루트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체 조사와 고용지원센터의 근로자 상담, 노동위원회의 신고 접수 등 크게 세 가지이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체에 일일이 문의해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기업이 입을 굳게 다무는 탓에 결과를 얻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해 곤혹스럽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잘랐다는 사실이 좋은 얘기가 아니므로 업체들이 말하기를 꺼린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담원이 구술조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는 기간제 근로자는 수가 적어 노동위원회 집계에도 한계가 있다.

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조사하지만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별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근속기간만 나타날 뿐 계약과 계약해지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동향을 직접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데다 경제위기에 따른 다른 실업자들도 많아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업이 일시에 대량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계속 나오는 만큼 기존의 실업대책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